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지금 중소기업은 IMF때 보다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중소기업의 8월 평균가동률은 전년과 비교하여 5.5%포인트 낮은 66.9%를 기록하여 지난 2월이후 7개월 연속 60%대의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생산 또한 전년 동월대비 2.3%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의 86%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64.7%가 3년을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이미 '불안' 수준을 넘어선 '심리적 허탈'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 증가 및 카드채부실 등 경영손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조건을 높이고 부실화 우려가 높거나 신용도가 취약한 경우 과감히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A은행은 올 상반기에 영업점장이 전결할 수 있는 대출금액을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신규대출시 담보가 있더라도 채무상환능력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미만이면 대출을 제한하도록 최근 대출심사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또 대부분의 은행권들은 담보인정비율을 50%대로 하향 조정하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담보

를 요구하고 담보가 없는 경우 대출금을 조기상환토록 요구함은 물론 대출연장을 중단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함께 이러한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만이 지난해 보다 자금사정이 좋아졌다고 한 반면 59.5%는 악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을 단순히 경제상황의 악화에서만 그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 보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있어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대출조건으로 부동산과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이 72.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순수 신용대출은 13.1%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은 3조 4천억원 수준으로 이 중 부동산 및 신용보증서 대출이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17.3%만이 순수 신용대출이다.

중소기업이 외부차입금의 76.6%를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19.4%는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등 외부차입금의 96.0%를 금융기관 및 정책자금에 의존하는 상황에

서 이러한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신용 및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만성적·구조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기관들의 담보관행은 비단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신용이 없는 기업도 담보만 있으면 대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흐름을 크게 왜곡시키는 물론 성장가능성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 국내경제의 성장기반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은 경기여건변화 등에 따라 경기상승기에 형성된 자산가격의 거품(Bubble)이 경기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붕괴(Bust)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이는 결국 담보물 하락에 따른 금융부실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산업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저축대부조합 및 지역은행의 담보위주 여신관행으로 부실화가 심화되어 대규모 도산이 발생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으나 금융정책 당국의 적절한 대처 및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신용위주의 여신관행 정착, 여신심사체계의 선진화 등을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국가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에 따라 80년대 후반 부동산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경제의 Bubble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90년대에는 부동산 및 주식가격 폭락으로 80여개의 금융회사가 연쇄 도산하였으나 정책당국의 적기대응 실패와 담보위주의 여신관행 지속으로 최근까지 금융위기가 계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우선, 금융기관들의 담보위주 여신관행을 하루속히 시정해야 한다. 오랜 관행으로 통용되어 온 담보위주의 대

출관행에서 벗어나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성, 사업성, 성장성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미래 상환능력에 기초한 여신심사 및 신용리스크의 분석을 통해 선진 신용평가기법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결정시에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담보물 만을 여전히 중요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중소기업신용조사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꺼리는 이유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명한 회계자료 제공,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개선과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축적과 유통 등 신용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조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공정보 등 신용정보를 축적·관리할 수 있는 신용조사전문기관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이 보기에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은 회계처리에 취약하고 무자료거래 등 분식회계에 노출되기 쉬워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공신력이 떨어진다. 신용대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네째, 정책자금 등 정부 재정자금 대출방식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관련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담보가 부족한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에 기초한 자금지원을 해준다면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금융관행 개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용취급 여신담당자의 면책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신담당자는 신용으로 대출한 중소기업의 채권회수가 곤란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더라도 금융기관이나 자체감사시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여신담당자가 신용대출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신용대출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신용대출을 적극 확대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사후 신용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에도 그 취급상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신용취급 사유로 관련직원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인 면책조항을 명시화해야 한다.

향후 신용대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인들이 향후 금융시책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신용대출 확대를 우선적으로 지적하였듯이 신용이 있는 기업들은 금융기관 대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함은 물론 제2의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인식이 중요하다. 결국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세제부 / 과장 임 승 중

**축
발 전**

뜻깊은 창립이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광신판지
대표이사 권 영

11월 1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축
발 전**

뜻깊은 창립이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삼화포장(주)
대표이사 정 덕 교

11월 1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